

‘양곡관리법 개정안 미숙지 尹 재의요구 건의 사실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장관, 국민 기만 책임져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허위 사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쟁점이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서 ‘시장격리의무제가 도입되면 매년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쌀 시장격리의무제가 도입되더라도 매년 1조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쌀값이 5~8% 이상 하락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하므로 매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의 이런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정 장관에게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자진 사퇴 등 책임을 질 것인지 물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시장격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자신의 답변이 옳으며, 사실과 다르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사실 확인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시장격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쌀 시장격리의무제가 도입되더라도 매년 1조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쌀값이 5~8% 이상 하락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하므로 매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의 이런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정 장관에게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자진 사퇴 등 책임을 질 것인지 물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시장격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자신의 답변이 옳으며, 사실과 다르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이 1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주 시민에게 전하는 감사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하고 있다.

“전주시민과의 약속 지키 것”

‘국회 입성’ 진보당, 당무위 열고 감사인사 올려

4·5 재선거를 통해 첫 국회 입성에 성공한 진보당이 전주에서 당무위원회 열고 감사 인사와 함께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배지를 단 강성희 의원은 국민 의힘의 상임위원회 배정 주장에 환담하고 턱도 없는 막말이라고 일축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지역 시·도위원장 강성희 의원 등 20여명은 11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 심판과 민생정치, 전주 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민생정치, 전주 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주 시민의 뜨거운 마음, 진보당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10만 당원뿐 아니라 열망과 함께 국회로 가는 것만큼 윤석열 심판과 검찰 목숨 등을 막아내는 일을 하고, 정치개혁 1번지로서의 자존심 꼭 지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강 의원은 “전주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임위 배정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최근 국민의회에서 진보당은 국방위를 안된다”라고 했다. “황당하고 턱도 없는 얘기가. 국회 신입생으로서의 장난과 면담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부과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장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점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작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요기요·배달의민족 등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대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1,358건에 달하고, 3년간 4,3배 급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입점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관리점점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조국 ‘법고전 산책’ 전주시민들 찾는다

더전주포럼 황현선 대표 초청, 19일 전주한벽문화관서 저자와의 대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주에서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저자와의 대화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등 고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책이다.

10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책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들과의 대화, 질의응답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전주 출신인 최강욱 국회 의원, 더전주포럼 대표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잡작 손님’도 등장해 이야기를 보낸다.

행사 내용은 유튜브 ‘황현선TV’로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는 책을 펴낸 오마이북에서 서울, 광주, 부산 등 권역별 행사를 진행했으나 전주 독자와의 만남을 아쉬워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전주에서도 독자들과의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수락해 기호·추진됐다.

이와 관련 황현선 전 행정관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전 장관의 법고전 산

책은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라며 “조 전 장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주 독자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뤄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 1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사전신청(https://bit.ly/ChdKukBook_Jeanju)을 받는다. 1인 1좌석 신청이 가능하며, 좌석은 현장 도착순으로 배부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준비한 더전주포럼은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지역 이슈와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자 조국 전 장관은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조성”

나인권 도의원 ‘재배·수출시 농가소득 새 돌파구’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사업과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전북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는 지난해 연말, 전북도가 전북연과 함께 발표한 국책사업 발굴 리스트에 포함된 사업으로 이날 발표된 총26개 국책사업 가운데 헴프 클러스터 사업이 주목받았을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각별했다.

헴프 클러스터는 0.3% 이하의 저환각성 대마인 헴프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재배단지를 조성해 의약품 등의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헴프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관련 바이오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선 난치병 치료제나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면서 헴프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

학계에 따르면 480여종의 천연 화합물로 구성된 헴프의 칸비디올(CBD) 성분은 뇌 노화와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뇌전증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나 의원은 “헴프의 세계시장 규모도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7억4,000만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16.8% 성장해 오는 2030년 167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관련 산업의 성장상에 주목했다.

지난해 5월, 농진청은 이미 의료용 헴프 생산을 위한 육종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이며, 이보다 앞선 2019년 국내 대학 두 곳은 의료용 헴프 재배 및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전북은 농진청과 국내 대학이 개발한 기술과 김제 민간육종 단지에 더해 대규모 재배가 가능한 새만금의 강점까지 활용하면 국내 의료용, 산업용 헴프 산업을 선점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산업용 헴프의 재배, 가공, 유통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조만간 입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인권 의원은 “의료용 헴프를 특용작물처럼 재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농가와 농업 소득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 농생명산업에 절호의 기회가 될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의 국책사업화를 김관영 지사에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행자위, 119종합상황실 방문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1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전북도 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들은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접수, 위치 파악, 출동 지령, 현장 대응 등 119 신고부터 접수·처리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위원들은 현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1일 평균 1,800여건의 신고접수를 처리하는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하여 이번 회기에 심사하는 출연동의안과 조직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전북형 국제교류사업과 민간교류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교육위, 정읍교육지원청 방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병지)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정읍지역 교육 현안을 확인하기 위해 정읍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육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확인하기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정활동은 정읍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과 정읍연지유치원 관련 주요 교육 현안 파악과 예로 사관 청취,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정은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촉진

윤정훈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환복위 통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윤정훈 의원은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사(10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안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이란 어패류, 연식식물 등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체를 포함한 염습지, 갈대밭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며,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그 가치에 대한 연구·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정훈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 에 전북도가 가진 서해안 연안의 뛰어난 탄소흡수원을 조사하고 보존·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관리, 확충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도시의 책무를 규정하며,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복구계획 수립 등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위탁 근거 등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